

[붙임 1] 추정실적 세부사항

[유형별 적발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 액 탈 루		1,418	1,900	2,945	<u>4,442</u>
법규 위반	수입요건 준수 위반	2,612	581	670	<u>3,643</u>
	원산지표시 위반	2,205	4,077	1,219	<u>1,805</u>
	외국환거래법 위반	4,063	2,504	1,605	<u>17,130</u>
	소 계	8,880	7,162	3,494	<u>22,578</u>
합 계		10,298	9,062	6,439	<u>27,020</u>

[주요 분야별 세부 적발 실적]

(단위: 억 원)

❶ 민생 먹거리 탈세 ▶ 할당관세 품목 부정수급 : 5개사, 516억원 ▶ 수입식품류: 9개사, 55억원	❷ 민생 공산품 탈세 ▶ 의약품: 8개사, 72억원 ▶ 생활용품 : 11개사, 286억원	❸ 고가 사치재 탈세 ▶ 명품, 주류, 수입차 : 16개사, 2,677억원
❹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 철강재 등 기반산업 품목 : 18개사, 30억원	❺ 안전인증 등 위반 ▶ 건설장비, 전기용품 등 : 9개사, 1,391억원	❻ 원산지표시 위반 ▶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등 : 23개사, 617억원

[붙임 2] 시사점 세부사항

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관세조사 및 외국환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진단이 강조되며, 기업의 사전통제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해당합니다. 2025년 관세청은 기업의 외환 및 과세구조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치재 품목(고가 명품, 주류 등)의 가격 조작 탈세, 수입요건, 정기 덤핑 심사제 도입, 원산지 표시 강화, 특수 조사팀 추가 신설 팀등은 관세청의 정책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고, 관세조사 통지 기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 연장한 점은 반대로 실제 관세조사 준비기간 동안 자료 준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 조사에서 강도 높은 조사 등도 예상됩니다.

동 발표자료에 대한 시사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시사점
관세/외환조사 측면	이번 발표는 고가 사치품 · 민생품목 · 안전인증 위반 등에서의 <u>관세조사가 '상시·기획' 수준으로 강화</u>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입 과세가격 결정 · 할당관세 신청 · 원산지 표시 · 외국환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u>법규 준수 점검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u>으로 해석됩니다. 관세조사의 경우 소급하여 5년 간의 모든 무역거래, 외환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오류가 누적 · 반복되었을 경우 벌금, 과태료와 같은 제재의 수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u>관련 업계는 전문가의 사전진단(Pre-Audit) 등을 통한 내부통제 · 컴플라이언스 체계 보완</u>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측면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전국 주요세관 전담조사팀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u>할 수 있어서, 강제수사 진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기업에서는 압수수색에 대응하고자 관련 절차, 범위,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이해를 필수적을 요합니다.

회계 측면	덤핑방지관세 관련, 수입업체의 경우 해외 생산자, 수출자가 제공하는 반덤핑관세 해당여부에 대한 정보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u>해당 수입품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해당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u>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반덤핑 및 우회덤핑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덤핑관세 부과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증빙을 갖추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는바, <u>이로 인해 예외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증빙을 갖추지 않아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유의</u>하여야 합니다.
관세행정 측면	관세조사(세무조사)는 전통적으로 세금추징이 주요 업무이지만, 보도자료 내용상 <u>법칙(강제)조사의 느낌을 주는 단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통관적법성 위주로 관세조사를 확장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되는 것으로</u> 판단됩니다. 금년도 관세청의 관세조사 방향은 물가불안을 악용하는 탈세 및 수입요건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안전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u>관세청은 특정 테마별로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운영</u>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관세청은 전통적인 세액징수 업무 외에 국제 무역질서와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u>미국 CBP와 같이 국경관리의 기능(국민건강, 보건, 안보 등)에 대한 업무도 강화</u>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질서 위반에 대한 조사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전적으로 무역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실무 측면	대다수 위험요소는 부서간 업무 Gray area에서 발생하며, 관세관청의 조사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전 프로세스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는 상당한 위험요소로 발전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최근 특정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 외환검사 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각 기업은 본인이 속한 산업군의 주요 관세이슈가 무엇이고, 사후 치유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응 측면	관세뿐 아니라 법률, 형사, 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기업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분야까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임직원의 관세 지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도 필요합니다. 관세청의 정책적인 동향 및 주요 산업군 이슈에 대하여 각 기업에 실제 미칠 영향에 대하여 1:1 무료 미팅을 통해 안내드릴수 있는바, 각 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고드립니다.